

# ‘기부 대 양여’ 한계… ‘정부 보조’로 꼬인 실타래 풀다

광주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 이전 사업 ‘게임 체인저’ 된다  
사업비 초과 시 국비 지원 ‘의무화’ … 국가 주도 사업 전환

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 문제가 ‘6자 협의체’ 타결로 새로운 전기를 맞은 가운데, 지자체가 사업비를 전적으로 부담하는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 열린 6자 회담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재정 보조 방안 마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과 처리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가 추진 중인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새 군 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대신 기존 군 공항 부지(중전부지)를 넘겨받아 개발 이익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최대 걸림돌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지적해 왔다.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중전부지 개발 이익만으로는 천문학적인 이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만약 이전 비용이 중전부지 개발 이익을 초과할 경우 막대한 빚을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수 조원을 들여 새 군 공항 건설, 이전 지역 지원, 중전 부지 개발 등을 하는 것이다. 사업 소요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다.

이에 실제 지난 열린 6자 협의체 회의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적극 반영됐다.

정부는 합의문을 통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보조를 포함해 자금 조성 방안을 신속히 제시한다”고 밝혔다. ‘보조’라는 표현이 명시된 것은 정부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전국 광주시 공공항이전추진단장은 “1개 군부대를 옮기는 수준이라면 기부 대 양여가 가능하겠지만, 지금처럼 대규모 사업은 현재 틀 안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부 재정 지원을 이끌어낼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군택(광주 광산갑)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 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돼 심사가 진행 중인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중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바로 이러한 재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개정안 제6조 제3항을 통해 이전 사업 및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가 양여 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경우 국가가 이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기존 법안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정부에 회피 명분을 주었다면, 개정안은 국가 지원을 강제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 파탄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업을 국가 주도의 공영 개발로 전환하는 결정적 열쇠가 될 전망이다.

이전 지역 이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책도 보장됐다.

이주민의 생계 지원과 정착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중전부지 개발 사업의 범위에 ‘주거 시설’을 포함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도 담겼다.

특히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안 제17조의3),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안



국방부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보고에는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주일석 해병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17조의4) 등 파격적인 특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전 사업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11월 26일 국방위 법률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되며 입법의 문턱에 올라섰다.

문제는 정부 부처의 신중론이다. 기획재정부 등은 타 사업과의 형평성과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재정 지원 의무화’와 ‘예타 면제’ 등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대구시와 ‘달빛 동맹’을 더욱 강화해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대구 역시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어, 두 지자체가 연대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한다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6자 회담을 통해 이전 사업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임이 재확인된 만큼,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며 “정부 보조금이 명문화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무안 등 이전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사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혁신당·진보당 “광주 군·민공항 이전 환영”

기부 대 양여 방식에는 우려  
“국가 주도·예산 명확히 해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야권은 광주 군·민공항 이전 환영의 무안 통합 이전 합의에 대해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사업 완수가 불투명하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정부가 참여한 6자 협의체의 합의는 61년 묵은 지역 난제를 풀 실마리이자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막대한 이전 비용을 지자체가 떠안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와 정부 책임의 모호함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리스크”라며 “합의의 기쁨이 지역민에게 또 다른 ‘희망 고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서 원내대표는 특히 “중전 부지 매각 대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은 자칫 광주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소중한 공간을 ‘아파트 숲’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며 “이미 부지를 확정하고도 돈 문제로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대구 군공항 사례를 반면 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합의가 말뿐인 약속이 되지 않으려면 정부가 단순히 승인만 해주는 방관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재정과 행정을 책임지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며 조국혁신당 차원의 입법·재정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김주엽 진보당 광주시당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합의는 중요한 진전이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10조 원에 달하는 군공항 건설비를 부지 개발 수익만으로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전남 광역연합의 성공과 무안국제공항의 서남권 허브 도약을 위해서라도 이전 비용 전액을 국비로 충당하고, 중앙정부가 직접 키를 잡고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 김영록 지사 “4년 내 무안 국가산단 조성 완료 첨단신산업 유치”

이 대통령 임기 내 조성  
RE100 산단이 목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4년 안에 무안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첨단신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7일 전남도청 기자회견을 찾아 “무안 국가산단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무안 국가산단 지정은 지난 17일 발표된 ‘광주 군 공항 6자 협의체’ 공동 발표문에 명시된 내용이다.

발표문에는 “무안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지정 및 무안군의 추가 지원사업에 대해 적극 반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산단 조성에는 76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 지사는 “무안 국가산단은 현재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단’으로 부르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RE100 산단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다만 RE100만을 절대 조건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식품산단과 같은 것이 포함되도록 문호를 열어두는 방향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정부가 지정을 앞둔 RE100(재생에너지 100%)산단과 무안 국가산단의 동일성 여부에 대해, 최근 정부가 전남도 전역을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한다면 동일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한 대기업이 무안에 공장을 짓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지만, 아직 산업단지 부지가 마련되

지 않은 탓에 거절했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국가산단 조성은 통상 9~10년이 걸리는데 정부가 절차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무안 국가산단 입주 기업을 선별해,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첨단신산업 중심으로 산단을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무안공항 활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첨단 대기업이 오도록 하는 것”이라며 “대기업 오도록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40326-중-166833호]

[광고]

##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 첨단우리병원

##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